

# 경찰수사론

3주차

이정덕 교수

## IV. 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

선증후포의 원칙	-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에 범인을 체포해야한다.
종합수사의 원칙	- 모든 정보자료, 수사자료를 종합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기술과 지식.조직을 동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종합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 범죄수사는 형사사건에 한하여 행하여야 하며, 순수한 민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권이 발동되어서는 안된다.
법령엄수의 원칙	-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V. 수사실행의 5원칙(번호순서가 진행순서임)

- 개념 :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수사방법.순서 등 기본 요소를 정립하여 수사에 적용하는 5가지 기본원칙.

1.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수사의 제1법칙
2.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3. 적절한 추리의 원칙
4. 검증적 수사의 원칙
5.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 1.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수사의 제1법칙

- 수사의 기본방법의 제1의 조건은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수사자료를 수사관이 완전히 수집하여 문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범죄수사는 문제해결의 과정인바 수사의 제1단계에서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하거나 멸실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 수집된 자료는 범죄행위자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과학적 지식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 면밀히 감식.검토하여야 하며, 수사관의 상식적인 검토나 경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 수집된 자료를 면밀하게 감식.검토함으로써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자료수집의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된다.

## 3. 적절한 추리의 원칙

- 수사자료를 모아 일단 정리가 끝나면 그것을 기초로 사건에 대하여 범인과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상의 추측과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유의사항)
-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 추측은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 추측은 어디까지나 가상적 판단(가설)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진위가 불명하므로 검증적 수사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확인될 때까지 그것을 진실이라고 확신하여서는 안된다.

#### 4.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추리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그 추리가 맞다면 증명으로 발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다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위에서 설명한 순서를 반복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수사는 이와 같이 직선이고도 순환적으로 행하여 지는 것이다.

#### 5.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 수사관의 판단을 형사절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그 판단이 수사관만의 주관적인 판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 대해서도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의사항)

- 판단을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것 → 객관적 자료
-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근거(증거)를 제시할 것

## 자치경찰사무와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제안이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 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 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0000호, 2020. 12. 0.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

### 제2장 자치경찰사무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에 대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범위와 이 영 별표에서 정한 자치경찰사무의 사항 및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빈도 등 치안여건과 보유 인력. 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절한 규모로 정할 것
3. 기관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 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할 것
4.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효율적일 것

제3조(수사에 대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중 수사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만 19세 미만인 소년이 행한 다음 각 목의 범죄(다만, 소년이 해당 사건에서 만 19세 이상인 자와 「형법」 제30조 내지 제32조에서 규정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학교폭력” 중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9조, 제26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감금죄(제28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 및 제324조의5(제324조의 미수에 한한다),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부터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의 미수에 한한다)까지, 제42장 손괴의 죄(제36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범죄
  - 나.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제229조(제225조의 범위에 한한다), 제230조,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5조,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중 제266조,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제319조, 제320조의 미수에 한한다),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29조부터 제332조(동종범죄를 3범 이상 범한 사건은 제외한다), 제342조(제329조부터 제332조의 미수에 한한다),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51조(제347조의 상습에 한한다), 제352조(제347조의 미수에 한한다),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60조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범죄

##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아동학대범죄”

##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는 제외한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다만,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는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8조의2, 제151조, 제151조의2제2호, 제152조제1호, 제153조제2항제2호, 제154조부터 제157조까지 규정된 범죄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에 규정된 범죄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5조의13에 규정된 범죄

##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에 관한 죄

##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가출인. 실종아동등 수색( 다만, 본 조 이외의 범죄로 인해 실종된 경우는 제외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전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수행)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V. 수사의 합리화

- 수사는 사실의 진상을 명백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히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공공의 복리를 유지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기술의 과학화와 조직수사운영체제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 ① 과학수사의 추진 : 과학적 지식 및 감식기술의 이용
- ② 수사기술의 향상(수사기술의 과학화) : 내사, 탐문, 조사, 증거수집 등 수사기술연구
- ③ 조직수사의 확립(수사조직의 합리화) : 수사와 감식의 일체화, 타 부서와의 공조수사 등
- ④ 능률적 수사운영체제 확립 : 수사요원 정예화, 장비의 현대화, 효율적인 협조와 운영 등

\* 수사경과 - 경찰청에서 수사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형사, 지능, 과학수사, 여성.청소년, 교통조사 등의 분야를 하나로 묶어 일반경찰과 분리해 독립적인 인사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제도

## VI. 수사의 적정화

- 범죄수사가 법정절차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행하여져야 함을 의미하고 수사에 있어서 적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조항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인권보호 :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합법수사 :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③ 타당한 수사 : 수사는 그 목적과 수단, 목표와 방법, 침해와 공익 사이에 비례가 유지되는 타당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능률적 수사 : 수사의 적정화의 또 다른 이념은 최소비용과 노력으로 신속.정확하게 수사를 실행 하는데 있다.

## I. 범죄수사의 과정

하강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관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심증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li> <li>- 엄격한 의미에서의 증거는 필요 없다.</li> <li>- 전개적(연역적)추리를 한다.</li> </ul>
상승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관이 검사 및 법관으로 하여금 틀림없다는 심증을 가지도록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li> <li>-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li> <li>- 집중적(귀납적)추리를 한다.</li> </ul>
상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수사는 대체로 하강과정을 거쳐 상승과정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나 이러한 순서가 반드시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li> <li>- 범죄수사는 공소제기 및 유죄판결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승과정 없는 하강과정은 있을 수 없다.</li> <li>② 하강과정 없는 상승과정은 있을 수 있다.</li> </ol> </li> </ul>

## II. 수사의 전개 과정

①내사 -> ②수사의 개시(입건)-> ③수사의 실행-> ④사건송치-> ⑤송치 후 수사-> ⑥수사의 종결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의 전 단계(입건 전의 단계)</li> <li>- 신고내사, 비신고내사, 진정내사, 첩보내사</li> <li>- 임의적인 방법 원칙(대인적 강제처분 불가) - 대물적 강제조치는 가능</li> <li>- 피내사자 접견교통권, 진술거부권 인정 - 진술거부권 고지 불요</li> <li>- 종결형식 - 내사종결, 내사중지, 내사병합, 내사이첩, 공람종결</li> </ul>
수사개시 (입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입건)</li> <li>- 현행범체포, 불심검문, 고소.고발 등 수사의 단서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다.</li> <li>- <b>실무상 범죄사건부에 기재</b>, 사건번호 부여(범죄사건부에 1건으로 처리)</li> <li>- 인지와 구별(인지는 입건의 한 방법)</li> </ul>
수사의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초동수사 - 신고접수, 긴급배치, 출동과 임장, 현장보존, 현장관찰, 현장감식 등</li> <li>② 기초수사, 탐문수사 - 기초수사(피해자, 현장, 피해품), 탐문수사 등</li> <li>③ 수사방침수립 - 수사관은 수사 실행 전에 현장에서 수집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여 수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li> <li>④ 수사활동 - 탐문수사, 감별수사, 공조수사, 광역수사, 수법수사, 유류품 수사, 장물수사, 알리바이 수사, 미행.잠복감시, 체포, 조사</li> </ul>
사건송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l>사법경찰관은 사건에 대하여 진상이 파악되고 적용할 법령과 처리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도 같다.</del></li> <li>- 사건 송치로 수사경찰관의 수사행위는 일단 종결되는 것으로 본다.</li> </ul>

경.검수사권조정전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즉 경찰은 수사 종결권이 없음)  
했으나, 조정 후에1차적 수사종결권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송치(경찰에 부여).

송치 후 수사	<div><div>- . 사건 송치 후에도 피의자의 여죄가 발견되거나(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검사의 보강수사</div><div>—자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활동이 전개된다.</div></div>
---------	--

수사 종결	공소제기		<div><div>- .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한 경우</div></div>
	불기소	각하	<div><div>-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불기소 처분, 내사종결(혐의 없음)</div><div>- .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공소권 없음, 죄안됨, 혐의 없음, 불특정)</div><div>- . 수사를 진행할 가치가 없는 경우</div><div>- . 고소.고발이 법률에 위반</div></div>
		공소권 없음	<div><div>- .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div><div>- . 형면제 사유(친족상도례)가 있는 경우</div><div>- . 사면법에 의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div><div>- . 동일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이나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div><div>- . 피의자 사망 또는 피의자인 법인이 소멸한 때</div><div>- .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div></div>
		죄가 안됨	<div><div>- . 위법성조각사유.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div><div>- .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조각(형법 제310조)</div><div>- . 친족.동거가족의 범인은닉, 증거인멸(형법 제151조, 제155조)</div></div>
		혐의 없음	<div><div>-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피의자가 범인이 아님이 명백)</div><div>-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증거불충분)</div><div>-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음)</div></div>
		기타	<div><div>- .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타관송치, 공소보류</div></div>

-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경찰과 수사 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함.
-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은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명문화되면서 시작됨.
- 이후 1962년 제5차 개헌에서는 '검사에 의한 영장 신청 조항'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명시되면서,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독점하는 현재의 구조가 만들어짐.

기존 경.검수사권

구분	현행
수사 지휘	검사가 경찰의 수사 전체를 지휘함
사건 종결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함
검사의 수사범위	검사의 수사 범위에 법령상 제한이 없음
영장심의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할 경우 경찰은 보완수사 후 검사에게 반복하여 재신청 가능
조서 증거능력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자필서명·날인, 진술한대로 기재'를 인정해야 재판에서 증거로 가능, 증명력은 별도 판단

-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공론화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민생치안과 관련된 일부 범죄에 한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검찰이 '경찰 수사권 독립 절대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무산됨.
-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2년 대선 공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세웠으며, 공약 실행을 위해 2004년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를 발족시킴.
- 그러다 2005년 11월 국회에 자치경찰법안이 제출되는 등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전을 이루는 듯 했지만 검찰의 강경한 반대로 결국 무산됨.
-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홍만표 당시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검사장급 간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남.
- 이후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란에 책임지겠다며 사퇴함.
- 한편, 경찰은 2011년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협상에서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은 확보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수시로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해 수사 효율을 해친다고 지적해 왔음.
- 기존 형사소송법 195조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主宰者)로서 사법경찰관(수사 경찰)을 지휘하고 수사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문재인 정부, 경.검 수사권 조정안 발표(2018. 6.)]

- . 정부가 2018년 6월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 .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등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뿐 아니라 종결권을 갖도록 했음.
- . 정부안은 헌법(제12조 3항)에 규정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일단 유지시켰으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으면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견제 장치를 마련했음.
- . 영장심의위는 검찰이나 경찰 중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함.

## [국회, 경.검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2019. 4.)]

-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19년 4월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함.
- .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거나 수사를 끝낼 권한(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



## [경.검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국회 통과(2020. 1.)]

-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구분	조정 전	조정 후
검경 관계	지휘 관계 -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함 - 검사가 지휘하면 경찰은 따라야 함	상호협력관계(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 -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경찰 수사	모든 사건 검찰 송치(수사 종결권 없음)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 송치(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 수사	모든 사건 수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 공무원 범죄, 경찰 송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피고인이 조서 내용 인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증명 되면 증거능력 인정	경찰 작성 조서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능력 인정

## 형사소송법

[시행 미정]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 개정이유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임.

## 검찰청법

[시행 미정] [법률 제16908호, 2020. 2.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15] [법률 제16863호, 2020. 1. 14, 제정]

## 개정이유

[제정]

### ◇ 제정이유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근거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범위를 정의함(제2조).

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둠(제3조).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처장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2명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차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처장,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직위에는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 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함(제16조).

바. 처장,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가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등 징계사유와 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2조부터 제43조까지).

자.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함(제45조 및 제47조).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86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공수처 소개

뉴스/소식

법령정보

국민참여

정보공개

#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

국민과 함께 만듭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 공지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채용 면접시험 시행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채용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3.12

- 공수처 공무원 채용 추가합격자 공고 2021.03.1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 인사발령(검임) 2021.03.01
- 공수처 수사관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추가자료... 2021.03.01
- 공수처 대변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 2021.03.01
- 공수처 공무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1.03.01
- 공수처 업무처리 현황 2021.02.21

## 보도자료



### 보도설명: 2021.3.8(월) 중앙일보, ...

2021.3.8(월) 중앙일보, '김학의'도 남구준이 말나... "이성운이 본인 영  
장 지휘" 기사 관련 보도설명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보도설명...

2021.03.08

- 보도자료: 공수처 인사위원회 개최 2021.03.01
- 보도자료: 공수처장 관훈클럽 주최 포럼 참석 2021.02.21

## 자료실



### 공수처장, 관훈클럽 주최 관훈포럼 기조연설(2...

2021.03.02

- 공수처 인사채용 및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 2021.02.01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취임식 2021.02.0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조직도



## 주요연혁

2019

12.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가결

2020

01.07

대통령 공수처 출범 준비 철저 지시

01.14

공수처법 법률안 공포

01.31

국무총리 담화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02.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발령

02.10

공수처 설립준비단 출범

2021

01.21

공수처 출범

## 법령정보

▣ 법률 · 시행령

▣ 공수처규칙

▣ 훈령/예규 등

▣ 입법/행정예고

🏠 > 법령정보 > 공수처규칙

# 공수처규칙

총 게시물 4건 현재 페이지 1/1

전체



검색

번호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수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운영지원담당관	2021.01.25	896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운영지원담당관	2021.01.25	967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운영지원담당관	2021.01.25	1,145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운영지원담당관	2021.01.25	1,144



# 패스트트랙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 '**안건 신속처리제도**'.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의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 → 법사위원회 검토 → 본회의 부의(附議, 안건을 토의에 부침)'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각 절차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 ▷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 ▷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한편,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 ■ 패스트트랙 절차

1.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소관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시
2. 해당 상임위 심사	최장 180일 → 90일 (미의결 시 자동으로 법사위 회부)
3. 법사위 심사	최장 90일 (미의결 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
4. 본회의 상정	최장 60일 → 생략 가능 (국회의장 재량 따라 부의 기간 생략 가능)
5. 표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

-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안) : 연동형비례대표제
- 공수처 설치법(2개) :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권은희 의원안(바른미래당)
-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

모두 고생 많았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주에 만나요.